장기백수 12만명…한계 이른 실업난

〈6개월 이상〉

전체 실업자의 12%…매달 2~3% 상승폭 유지

기업들 고용 저조…대졸 신입 경쟁률 더 치열해져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000명) 중 1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최근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0.07%포인트 줄어든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2014년 11월 이후 30개월간 같은 달 기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지난 3~5월까지 각각 2.55%포인트, 2.92%포인트, 1.62%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달 2~3%포인트 내외의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장기 백수 비중은 2월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취업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10월께 절정에 이르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8.96%였던 장기 백수 비중은 매달 올라가 같은 해 8월 18.27%로 정점을 찍었다. 2015년 역시 2월 장기 백수 비중이 5.49%로 가장 낮았고 10월이 13.83%로 가장 높았다.

단기 실업은 구직과정이나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이다. 하지만 구직에 잇따라 실패해 발생하는 장기실업은 경기 이상 징후로 읽힌다.

올해 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이 기업들에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35.7대1로 2015년(32.3대1)보다 더 치열해졌다.

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장기 백수 비중도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 추경 대상인 경찰 등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수출 등 일부 분야이고 올해 1분기에는 단기직 위주인 건설업 경기에 기댄 측면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70.37 (+12.84)
- ↑ 금리 (국고채 3년) 1.70% (+0.01)
- ↓ 코스닥 663.28 (-2.49)
- ↓ 환율 (USD) 1140.90원 (-3.10)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배 올린다

공정위,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60%→140%

자진시정 땐 감경률 축소

앞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더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더 까다로워져 실제 체감하는 제재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과징금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통상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했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뿐만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된 반면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하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美 JD 파워 신차 평가 기아차 2년 연속 1위

기아자동차가 미국 권위 있는 시장조사기관 제이디파워(J.D.Power)의 신차품질조사(IQS) 평가에서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지난해 8월 미국 시장에 독립 프리미엄(고급차) 브랜드로 진출한 제네시스도 평가 첫해부터 2위 자리까지 뛰어올랐다.

21일(현지시각) 현대·기아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 결과에서 기아차는 72점으로 전체 32개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미국에서 출시 판매된 신차이며, 조사는 구입후 3개월이 지난 고객에게 233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수는 100대당 불만 건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크다는 뜻이다.

1987년 시작된 JD파워 신차품질조사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2년 연속 전체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대·기아차는 설명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리던 포르쉐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이외 현대·기아차 그룹 브랜드 가운데 제네시스는 2위(77점), 현대차는 6위(88점)에 이름을 올렸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순위만 따로 보면, 시장 '새내기'인 제네시스가 2013년 이후 4년 동안 선두를 지켰던 포르쉐(78점)를 제치고 정상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순위가 지난해 3위에서 6위로 세 계단 떨어졌다. /연합뉴스

삼성 '패밀리허브' 뉴욕 체험 행사 삼성전자 북미총괄 이윤철 전무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삼성 뉴욕 마케팅센터(삼성 837)에서 열린 2017년형 '패밀리허브' 체험 행사에서 패밀리허브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전남 아파트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

7~9월 4500가구 입주

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전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해 지난주(-0.07%)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5% 상승했다.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하며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지속됐다. 전세가격은 0.04% 상승하며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9월 여름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4500여가구가 이사할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7월에는 동구 산수동 광주시 이스토리 111가구, 소태동 797 수안채휴 84가구, 북구 매곡동 대광로제비앙 213가구, 서구 쌍촌동 프라임 아너팰리스 47가구, 광주효천2 B5공공분양 521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8월에는 광산구 쌍암동 중흥 S클래스 406가구 서구 화정동 해광 샹그릴라 센트럴 285가구, 선운3 3블록 10년임대 1022가구, 9월은 북구 본촌동 이안 광주첨단아파트 834가구, 북구 연제동 첨단 연제 고운하이플러스 25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LTV·DTI 축소전 대출 신청 급증

4대은행 1주전보다 10.6%↑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집을 사려는 이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이들 은행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인 19일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주일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하루 뒤에 대출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은행에 접수된 대출신청 건수는 19% 넘게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선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세종·광명 등 경기 일부· 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축소하는 대출 규제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대출금액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면 대출 실행일이 LTV·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대출신청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리해서 집을 계약한 사람들은 LTV·DTI 규제 강화 전에 서둘러 대출신청서를 접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